

# ‘폰 안에 쏙’...통신3사 이어 카카오·네이버 모바일 신분증 준비

## 모바일 신분증 시대

### 통신3사 ‘패스’ 앱으로 운전면허증·주민증 확인 카카오톡·네이버 앱도 모바일 신분증 도입 준비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정부 공인...행안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중

운전면허증에 이어 주민등록증까지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간다.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을 대체할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주민등록법 제25조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패스(PASS) 앱에서 제공한다. 지난 10일 열린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통식에서 정식으로 대중에 공개했다.

이로써 국가 공인 신분증 모두를 간편하게 스마트폰에 소지할 수 있게 됐다. 통신3사는 지난 2020년 6월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패스 앱에서 선보인 바 있다. 이는 민간 사업자 최초의 사례다.

패스 앱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 ◆카카오·네이버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준비

통신3사에 이어 카카오와 네이버도 각자 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을 통해 주민등록등본/초본, 운전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해

주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물 신분증을 대체하지 않는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네이버 앱을 통해 전자증명서, 공인자격증, 학생동문증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며 “지난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네이버 앱에 저장된 국가자격증을 통해 신분확인을 거쳐 투표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있다. 네이버 역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 관계자도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도입을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 “도입 시점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역시 자사 스마트폰 내 생체인증 서비스인 ‘삼성패스’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인시허가를 지난 2020년 3월에 받은 바 있다.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을 사용해 스마트폰과 실물 신분증을 접촉시키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정부기관으로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방법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 ◆‘모바일 신분증’ 간편 발급...실물 신분증만 있으면 끝

패스 앱은 통신3사 고객이라면 누구나 설치해 이용 가능하며, 모바일 신분증 등록 절차도 간단하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패스 앱에 로그인 후 ‘모바일 신분증’ 메뉴에서 통신3사 PASS 인증과 주민등록번호, 실물 주민등록증 발급 날짜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단 ‘운전면허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패스 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을 촬영해야 이용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모바일 화면에서 본인의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함께 QR코드가 표시되며 ‘상세정보 표시’를 선택하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유사하다. 모바일 신분증에서는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노출 없이 성인 여부만 확인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외부 기관에 제시할 때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정부24앱에 들어가 모바일 신분증 QR코드를 촬영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통신3사는 신분 도용 등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화면 캡처 차단 및 QR무니 초기화 등 보안 기능을 강화했다.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신분증이 잠금 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통신3사 패스 앱 뿐만 아니라,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분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도 있다. 앱마켓에서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을 설치한 후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

## 해킹·도용 위험 없을까?

###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이기 때문에 유출할 경우 피해 커 전문가들 “이제 막 상용화된만큼 안심하다고 단언하기엔 일러”

# 지난해 이스라엘은 백신여권 ‘그린패스’를 도입하면서 보유자의 개인정보를 QR코드로 변환해 스마트폰 등에 저장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문제는 이 QR코드가 암호화되지 않아 위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점이다. 위조된 백신여권이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통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서버로 암호화에 나섰지만 느장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백신여권에서 한단계 더 진화한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만큼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크다. 모바일 신분증을 제공하는 중앙 서버는 물론 개인 사용자의 단말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탈취되면 개인 신상 도용, 증명서 유출 등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정부, 자기주권 신원 증명으로 보안 강화...DID 기술이 뒷받침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확산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것이 자기주권 신원증명(Self-Sovereign Identity) 방식이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통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기존 신원인증은 이름,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주소, 나이 등 고객이 개인정보 모두를 제공해야 했다. 하지만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개인 정보 소유 및 이용 권한을 신원 주체인 사용자가 갖게 된다.

자신의 스마트폰에 본인 신원 정보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신원 확인 요청이 있

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스마트폰에 저장된다.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탈중앙화 신원증명(DID)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구축된 신원증명 서비스로, 신원증명을 위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이를 블록 단위로 구성해 저장한다. 이후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듯 블록체인 지갑에서 DID를 제출해 신원을 증명한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신분증, 사용 이력 등의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접근을 통제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보안기업 라온시큐어 중심인 옴니원 ▲SK텔레콤과 주요 은행들이 연합한 이니셜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 아이콘루프가 주도하는 마이아이디 등이 대표적인 DID 플랫폼이다.

올해 7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발급되고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 DID 기술이 적용됐다. 라온시큐어와 LG CNS는 DID 플랫폼 옴니원을 기반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자기주권 신원증명을 구현했다.

모바일 신분증에 적용되는 보안정책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이동3사의 패스 앱이 내놓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본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강화인 것이다. 또 화면 캡처 차단 및 QR무니 초기화 등 강력한 보안 정책을 적용했다. 특히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이용해서 주민등록증 정보가 패스 서버나 단말기에는 저장되지 않도록 했다.

#### ◆“편의성과 보안성 모두 충족해야”

그러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이제 막 상용화된만큼 해킹이나 도용 피해로부터 안심하다고 단언하기에는 이르다.

김진욱 IT법학연구소장(변호사)은 “모바일신분증이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초기 취약점을 노린 해킹이나 시스템 미비 등에 대비해야 한다”라며 “신기술의 도입만큼이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등의 꼼꼼한 활용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존 법제를 활용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는 “첨단 기술이 모바일 신분증에 적용됐다고 하지만 실물 신분증과 같이 다양한 위변조 기술이 적용돼야 한다”라며 “DID 외에도 다양한 연계 기술을 장려하는 지원사업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해킹 등에 대비해 고도화된 보안기술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보안 전문가는 “모바일 신분증이 사용자들에게 실물 신분증과 같은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보안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라며 “관련 보안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뉴스

<b>호남신문</b> i-honam.com		<b>대표전화 (062) 229-6000</b>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b>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b>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b>동부취재본부</b>	<b>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b>	<b>(061) 905-2011</b>
<b>서울취재본부</b>	<b>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b>	<b>(02) 2238-0003</b>
<b>기사제보 (062) 222-2580</b>	<b>광고직통 (062) 228-2580</b>	<b>팩스 (062) 222-5547</b>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를 위해 서러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